

『서울특별시의회 ‘화해·치유재단’ 해산 및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강서4선거구 출신 한 명 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화해·치유재단’ 해산 및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제안설명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 그럼 결의안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난 2015년 12월 28일 한·일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의 결실인 ‘화해·치유재단’은 일본 정부로부터 거출 받은 10억 엔으로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가족들에게 현금을 주겠다고 감언이설과 회유를 자행하고,
- 피해자 위로금 명목의 현금을 수령할 것을 강요하는 등 위안부 피해자들의 존엄한 명예와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 여기에 일본 정부는 여전히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인정하지 않은 채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10억 엔을 출연했다는 점을 내세워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고, 나아가 한·일 통화스와프 협상 협의 중단 및 고위급 경제 협의 연기 등의 조치를 발표해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 침해를 자행하는 ‘화해·치유재단’을 즉각 해체 시키고, 역사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도 없이 출연 받은 10억 엔을 일본 정부에 반환하며, 한·일 양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법적 배상 등을 위해 책임 있는 재협상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결의안을 발의하는 바입니다.
-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